



# 원자력의 대중적 지지 기반 형성을 위한 접근 방식의 재검토

한 동 섭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 형 일

극동대학교 방송영상학부 교수

## 문제 제기

원자력 정책은 다른 에너지 정책과 달리 그 중요도에 비례하여 안전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가 구축되어야 하고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원자력의 특성상 사회 전반의 이해와 정책 타당성, 정당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원전의 필요성이나 경제성, 환경 친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이다.

그만큼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도 낮고 대중적 지지 기반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2015년까지 9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여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원전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년 이상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던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은 최근 유치 후보 지역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에 유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안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간의 원자력 정책 추진 과정이 되돌아보면, 원자력에 대한 대중적 지지 기반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어 왔으나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혐오 시설이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손실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혐오 시설이 들어올 경우 당장 생업을 잃게 되거나 지역 발전이 어려워지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및 국민들의 해당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무형의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관련 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나 저항은 당연한 것이다.

결국 아무리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

로 인해 발생할 주민들의 손실이 더 크다면 주민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혐오 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저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정책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 정책이다.

즉 원전과 같은 시설의 입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원 정책은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국민들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나 지원 정책을 보고 오히려 원자력이 정말로 위험하고 그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실재한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원자력의 대중적 지지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기존의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방어적이며 소극적인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원자력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시설 입지의 반대 급부로 지역 개발을 약속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킬 뿐이다.

또 단기적으로는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거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책의 집행에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손실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원 정책이나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소극적 태도는 원자력의 부정적 측면을 스스로 인정하는 매우 수세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정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접근 방식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된다.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원자력 시설 입지와 원자력산업 발전이 지역 혹은 국가에 주는 이익과 편익을 강조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원자력의 대중적 지지 기반 형성을 위해 수행되었던 접근 방식의 한계를 살펴보고, 새로운 접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대중적 지지 기반 형성을 위한  
전통적 접근 방식**

원자력 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전개된다.

하나는 원자력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

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이나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반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원자력 홍보 활동이다.

전자가 시설 입지를 비롯한 원자력 정책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라면, 후자는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도움을 얻기 위한 간접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하겠다.

**1. 주변 지역 지원 전략**

**가. 지원 정책의 필요성**

원자력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보상책은 일종의 혐오 시설 입지 정책이다.

혐오 시설이란 쓰레기 소각장·매립장,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등 당해 지역내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고 비선호하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다.

혐오 시설 입지 정책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물 설치, 즉 공공 시설 입지라는 핵심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분배 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혐오 시설 입지 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 시설 입지 정책은 정부가 정책 주체로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분배 정책의 특성을 갖는다.

분배 정책은 '누가 사회적 가치

의 수혜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일정 행위의 대가로서 경제적 가치나 권리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 경우 정책 수혜 집단은 특정 수혜 집단이나 개인이 된다.

다른 하나는 정책 수혜의 대상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인 경우를 말한다.

협오 시설 입지 정책은 이 두 번째의 분배 정책적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정책 집행에 있어서 단순히 혜택을 누리는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시설 입지로 발생하는 손실이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수용 확보는 매우 어렵다.

둘째, 따라서 협오 시설 입지 정책은 다른 유형의 정책들보다 정책 수용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정책으로, 정책 자체에 이미 주민들의 수용 거부 가능성이 예상되는 정책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그 자체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의문과 부정적 견해가 주장되어 그 입지 결정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협오 시설 입지 정책은 국가 운영 및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공 시설로서 사회 전체에 이익(공익)을 제공하는 공공성을 갖는 동시에 입지 예정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경제적 가치,

건강 등의 특수 이익인 사익의 침해 가능성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양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협오 시설 입지 정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분배 정책의 성격과 다르게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거부 양상이 나타난다.

전국 각지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같은 협오 시설 입지 정책은 그 편익이 국가 및 지역 사회 전체에 주어지는 정책인 반면, 시설 입지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입지 주변 지역에 부정적 효과를 유발시킴으로써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입지로 인한 편익보다 비용을 크게 느껴 수용을 거부하는 양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체 사회의 편익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간에 발생하는 괴리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내지 보상이 필요한 것이다.

#### 나. 지원 현황

원자력 시설이 들어서지는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전까지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나 피해 보상 없이 당국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책 추진 방식이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주변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1987년 10월 지역협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 고용, 생업 개발 협력, 숙원 사업의 협조, 행사 협력, 지역 업체 발주 등 지역 사업의 협력 방안을 수립하였다.

또 1989년 6월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당시에는 전전년도 전기 판매 수입금의 0.3% 이내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출연, 소득 증대 사업, 공공 시설 사업, 육영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1992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4차에 걸쳐 지원법을 개정하여 기금 규모가 전전년도 전기 판매 수입금의 11.2%로 대폭 확대되었다.

또 2000년 12월 4차 지원법 개정을 통해 지원 사업의 관리 주체가 한전에서 산업자원부로 바뀌었고, 지원사업기금이 폐지되고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했으며, 2001년 2월 지원법 시행령 개정시에는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자율 유치와 다수 호기를 설치한 지역



에 대해서는 건설비의 0.5% 상당액을 특별지원금에 가산하여 지원토록 했다.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첫째는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소득 증대 사업, 공공 시설 사업, 주택용 전기 요금 보조 사업 등이다.

둘째,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 유치 지원 사업, 산업용 전기 요금 보조와 다양한 신규 사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셋째,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에 지급하는 한편,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각종 첨단 교육 기자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역 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지역 문화 행사 및 체육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숙원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건설 초기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원전 건설 촉진 및 민원 해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역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첫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형 숙원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원전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기본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특별 지원 사업을 지원하였다.

둘째, 원전 주변 지역 학교에 최첨단 어학 실습실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의 어학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셋째,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주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육영 설비를 지원하고, 체육 활동 및 교육 시설 지원도 수행했다.

넷째,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을 통해 국민 이해 사업, 문화 진흥 사업 및 차세대 교육 사업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했다.

최근 개정된 지원법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발전소 운영 기간에 상관없이 발전량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운영 기간 경과에 따라 지원금이 감소되어 발생하던 지역 주민의 불만이 해소되고, 발전량이 많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주변 지역 대상의 지원 사업 4개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지원금 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게 되었다. 현행 지원 제도는 세분화된 사업별로 지원금이 정해져 있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 위주의 운영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지원금 한도 제약으로 시행을 못하던 중·대형 지원 사업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원전 등 주민 기피 정도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기금 외에 발전사업자 부담으로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넷째, 한전과 전력 수급 계약을 맺은 발전소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주변 지역도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되었다.

## 2. 사회적 수용성 증대 전략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과 더불어 일반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불식시키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정책도 원자력의 대중적 지지 기반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한 활동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와 민간 전문 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다.

### 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수원은 사업자 입장에서 원전 운영의 투명한 공개와 사업의 당위성 홍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원전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원전 사고·고장 정보의 공개는 그 대상에 따라 신속하게 공개할 필

요가 있는 경우 언론 공개와 인터넷 공개를 병행하고, 그 외의 공개 대상 정보는 인터넷에만 공개한다.

또 원전 운영 정보 시스템을 통해 운전 현황, 방사선 관리 등 원전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다.

한편, 원전 운영 공개지인 <㉑. 파워>를 매달 3만부씩 발간하여 지역 주민, 학생, 일반인 등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원전 본부별로 소식지를 발간, 주기적으로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또 한수원과 정부가 공동으로 매년 국내 원전 정책, 운영 현황, 방사성 폐기물 관리, 국내외 동향 등 원자력 발전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한 「원자력발전백서」를 발간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설 공개는 원전의 실상을 직접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원전별로 홍보 전시관을 갖추고 연중 방문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고장 관련 설비도 지역 주민이나 시민 사회 단체 요청시 공개하고 있다.

일부 원전의 경우 발전소 내부 시설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원전의 안전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둘째, 차세대에게 원자력을 바르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원전 사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

이라는 점에서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이나 교사들이 원자력과 친밀해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일일 명예 교사 참여, 교재 제공 및 교육 활동 실시, 전국 과학 교사 원자력 강습회, 교원 연수 및 교원 시찰, 청소년 원자력 교실, 현장 학습, 청소년 원자력 캠프, 장학금 지급, 원자력 작문 모집 및 원자력 공모전, 원전 주변 학생 사생대회 등이 있고, 기타 다양한 홍보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와 원자력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차세대교육협의회」 운영을 통해 교과서의 원자력 내용을 분석하고 바르게 서술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주로 언론 홍보와 인쇄물을 이용하고 있다.

언론 홍보에서는 원전 이슈 사항 발생시마다 언론 공개를 통해 원전에 대한 왜곡, 과장 보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원자력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보도 자료 배포, 언론자 취재 지원, 현장 취재시 동행 설명, 기고 및 독자 투고 등을 통해 중앙 언론은 물론 지역 언론에까지 보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주간지, 월간지, 전문지에 특집 및

전문가 기고를 통해 특수 계층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인쇄물을 통한 홍보는 매월 <㉒. 파워>를 발간하여 지역 주민, 도서관, 주요 인사 등에 배포하여 원전 운영 현황 및 원전 주변의 방사선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전에 대한 종합 홍보지인 「원자력에너지」를 발간하여 홍보관 방문객과 학교 등에 배부하였고, 차세대 홍보 책자인 「1318 세대를 위한 원자력 이야기」를 교육 교재로 활용하도록 했다.

넷째,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 경영을 경영 방침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지역 협력을 통해 잘사는 지역 건설, 함께 하는 공동체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 홍보는 속성상 지역 주민과의 밀착 홍보를 통한 지역 사회와의 유대 강화와 각종 지원을 통한 지역에서의 사회 공헌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계발·보급하여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되었다. 문화재단의 주요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과학 기



술적 원리와 이용 현황, 에너지의 중요성 등을 일깨우는 홍보물을 제공한다.

학습 효과와 흥미 요소를 갖춘 과학 콘텐츠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지면에 연재했으며, TV 방송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월간지는 친근감을 주는 형태와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원자력에 대한 정보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포함한 생활 교양지로서의 성격을 갖추어 일상 생활에서 흥미있게 읽히고 활용되는 잡지가 되도록 했다.

홍보용 간행물은 원자력에 대한 심층적 내용을 기술한 책자와 간결하고 알기 쉬운 리플렛, 만화 등 대상에 따른 활용도를 고려하여 제작했다.

홍보용 애니메이션은 초등학교 저학년층에 눈높이를 맞추도록 친근하고 인기 있는 캐릭터를 등장시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

둘째, 정보화 사회의 진행과 인터넷 이용 인구의 급증에 부응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 이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원자력 포털 사이트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유용한 정보 습득은 물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네티즌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벤트와 플래시 공모전 등을 개

최하여 네티즌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관련 쟁점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도록 했다. 또 홍보용 간행물의 내용을 웹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셋째, 차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원자력 작문과 원자력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했다.

매년 4월 과학의 달에는 체험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여름 방학에는 전국의 중·고교생과 원전 주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원자력 과학 캠프를, 겨울 방학에는 초등학생 대상 원자력 테마 캠프를 개최한다.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원자력계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들이 일선 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진행하는 원자력 교실 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또 초·중등 교사 대상 원자력 이해 기초 과정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원자력 교육용 지도서를 배포하였다.

넷째,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실제 원전을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봄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여론 주도층의 경우 직접 보고 느낀 결과가 주변에까지 파급된

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나라의 운영 실태와 지역 발전상 등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과학 및 환경 담당 교사와 원자력 전공 대학생들에게는 원자력 현장 연수 및 학습회를 시행하고, 공무원 교육원과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 각급 사회 교육 기관에는 원자력 강사를 파견했다.

다섯째, 원자력 전시관은 보고 듣는 효과를 통해 방문객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다. 현재 한전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전기에너지관을 비롯, 서울시 교육과학연구원과 국립서울과학관, 전북 고창의 삼인 종합학습원 내에 원자력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전시물을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하는 한편, 최신의 정보를 보다 흥미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시 내용을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아울러 과학의 달 행사, 어린이날 특별 행사,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하여 관람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 3. 한계점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원자력 관련 시설이 들어서지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보상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저항을 줄이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원자



원자력 시설의 문화 콘텐츠 산업화는 원자력 시설 이미지의 극적인 변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원전 시설이 교육, 문화, 관광, 레저의 중심 기지가 됨으로써 국민들은 원전 시설을 매우 과학적인 동시에 현대적이며 건강한 생활 문화의 중심으로 인식할 수 있다.

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원자력의 대중적 지지 기반을 형성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원자력 관련 시설 입지를 둘러싼 정책 당국과 지역 주민간의 갈등은 점점 더 첨예해지는 경향이 있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는 높아졌지만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 마디로 기존의 전략적 접근 방식들의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한계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 관련 시설이 들어

서는 지역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 차원의 접근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자력 정책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다분히 사회 심리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보상이나 지원책이 제시되어도 주민들이 느끼는 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 결국 해당 시설이 들어서고 약속된 지원이 다 이루어져도 갈등의 소지는 남게 된다.

둘째,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지역 주민들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원자력 시설이 들어오는 해당 지역과 그 주변 인접 지역간에 가장 심각하게 드러

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시설 입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충분한 보상을 받는 반면, 인접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준하는 피해를 입으면서도 보상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셋째, 현행 지원 방식으로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지지 기반 형성에도 많은 어려움을 야기한다.

일반 국민들은 원자력 관련 시설이 실제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지역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처럼 현재의 접근 방식은 원자력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미봉하는 차원에 그치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과거와 똑같은 정책 실패의 경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내의 원자력 관련 정책 집행의 사례를 보면 해당 지역만 바뀌었을 뿐 갈등의 전개 양상이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새로운 접근 전략의 모색

이제 원자력에 대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는 소극적 차원의 손실 보상 수준의 정책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즉, 원자력 관련 시설로 인한 피해를 줄여준다는 수세적 접근이 아니라 원자력 관련 시설의 입지가 지역 주민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원자력이라는 소재 자체를 문화 콘텐츠 내지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은 쓰레기 처리장이나 하수 처리장, 장례식장 등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각종 비선호 시설 입지 정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공공 시설의 현대적 활용 방안은 'Multi-Use', 'Multi-Participation' 개념을 적용한 문화 시설화, 대중적 지지 획득 및 경제 효과 창출 전략에 기초한다.

원자력 관련 시설은 기본 시설을 조금만 보완해도 과학 교육 시설, 사회 교육 시설, 지역 역사 교육 시설, 소규모 과학 박물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원자력의 개념과 이미지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 과학 게임 시설, 과학 시청각 교재, 방송 콘텐츠(위성 DMB, 지상파 DMB,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용 등) 등을 개발할 수도 있고,

원자력 과학 원리 및 주변 관광 자원을 소재로 한 소규모 놀이 시설, 과학 출판 시설 및 북 스토어 등의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자력 시설은 훌륭한 문화 체험 단지로 거듭 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시설은 최신 건축 기술과 문화 콘텐츠를 동원하여 누구나 꼭 방문하고 싶은 가족 문화 시설로 건설한다. 이들 시설은 개별 원전 시설의 형편에 맞게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여 알차게 구성될 수 있다.

특히 주변 관광지나 문화 유적 및 교통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여 문화 관광 벨트화를 시도하면 원자력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 허니문 여행지, 수학 여행지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자력 시설의 면모를 낙후되고 위험한 지역의 이미지에서 세계 어느 곳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최신 문화 타운으로 변화시킨다.

이처럼 원자력이라는 문화 콘텐츠 산업 및 관광 산업의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어 원자력 산업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은 물론 문화 콘텐츠 산업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같이 새로운 모델의 원자력 시설 중심 문화 관광 벨트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 최신 홍보 기법을 활용하여 전 국민에게 홍보된다.

원자력을 문화 콘텐츠 산업 및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실효성을 거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지지 기반도 확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원자력 관련 시설을 단순히 에너지 생산 시설이 아닌 에너지 교육 및 문화 산업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원자력 시설의 문화 콘텐츠 산업화와 이를 활용한 문화 관광 자원화는 원자력시설을 현재 가장 유망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 및 문화 관광 산업과 연계시킴으로써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현지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러한 시설은 원전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문화적이고 세련되며 건강한 이미지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양시킬 수 있다.

지역 주민은 원자력 시설로 인해 경제적 혜택 및 사회 문화적 자부심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원전 시설 부지 선정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 국민이 방문하고자 하는 시설로 변모하게 됨으로써 원자력이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국민들은 원자력 문화 시설 방문



을 통해 원자력의 경제성, 안전성, 국가 자원으로서의 필요성 등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단순 홍보가 가져올 수 없는 체득적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원자력 시설이 교육 시설 및 주말 문화 레저 시설이 되면 자녀를 둔 가정의 호감을 배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자력 시설의 문화 콘텐츠 산업화는 원자력 시설 이미지의 극적인 변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원전 시설이 교육, 문화, 관광, 레저의 중심 기지가 됨으로써 국민들은 원전 시설을 매우 과학적인 동시에 현대적이며 건강한 생활 문화의 중심지로 인식할 수 있다.

셋째, 원전 시설을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체득적 이해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차세대에게 원전 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 줄 수 있다. 또한 원전시설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과학 교육 효과 제고시킬 수 있다.

넷째, 원자력, 문화 콘텐츠, 문화 관광 개념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 가치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원자력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문화 관광 산업은 각기 분리된 영역에서 각자의 산업적 발전을 모색해왔다.

원자력 시설의 문화 콘텐츠 산업화/관광 자원화는 이들 산업을 원자력 시설을 중심으로 융합시킴으로써 각각의 산업으로 이룰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모델을 개발했다는 데 산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주변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역 경제는 자본 유치가 손쉬워지고 문화 산업 및 관광 산업이 적극 진출하게 되어 고부가 가치형 경제 구조로 탈바꿈 된다. ☞

#### 〈참고 문헌〉

Atwater, T., M. B. Salwen & R. B. Anderson(1985), "Media Agenda-setting with Environment Issues", *Journalism Quarterly*, 62, 393-7

Brosius, H. B. & H. M. Kepplinger(1990),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elevision News", *Communication Research*, 17(2), 183-211

Coombs, W. T.(1999), *Ongoing crisis communication: Planning, managing, and responding*, Thousand Oaks, CA: Sage

Greenberg, M. R., D. B. Sachsman, P. M. Sandman & K. L. Salome(1989), "Network Evening News Coverage of Environment Risk", *Risk*

*Analysis*, 9(1), 119-126

IAEA(2002), *Communication Planning by the Nuclear Regulatory Body*

Sandman, P. M., D. B. Sachsman, M. R. Greenberg, M. Gochfeld & S. Dunwoody(1987), *Environmental Risk and the Press: an Exploratory Assessment*, NJ: Transaction Books

Salwen, M. B.(1988), "Effect of Accumulation of Coverage on Issue Salience in Agenda-setting", *Journalism Quarterly*, 65, 100-6

Singer, E. & P. Endreny-(1987), "Reporting Hazards: Their Benefits and Costs", *Journal of Communication*, 37, 10-16

Strodtzoff, G. G., R. P. Hawkins & A. C. Schoenfeld-(1985), "Media Roles in a Social Movement: a Model of Ideology Diffusion", *Journal of Communication*, 35(2), 134-153

Wober, M. & B. Gunter-(1985), "Patterns of Television Viewing and of Perceptions of Hazards To Lif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5, 99-108